

“한국 국가기록 관리의 이론과 실제 : 기록이 없으면 역사도 없다”

(곽건홍 지음. 서울 : 역사비평사, 2003)¹⁾

설문원 *

불투명한 전망 위에서

유례없이 개혁적인 기록관리법이 제정되었다. 대학원의 기록관리과 정도 속속 문을 열었다. 그런데 정작 기록관리 현장에서는 변화가 보이지 않았다. 핵심조항의 시행은 자꾸 유보되었고 일부 조항은 개악되었다. 새 법률에 따른 국가기록관리체제체가 그 몸통을 온전히 드러내야 할 2004년이 눈앞에 다가오는데 시야는 온통 안개뿐이다.

정부기록보존소 곽건홍 학예연구관의 『한국 국가기록 관리의 이론과 실제』는 이런 상황에서 나왔다. 부제목 “기록이 없으면 역사도 없다”는 말하자면 단말마의 외침이다. 국가기록관리기관의 심장부에서 나온 외침이라 더욱 놀라웠다. 그는 높은 장벽을 실감하며 체념하거나 절망을 안으로 삼키며 ‘때를 기다려야(?)’ 할 공무원 아닌가. 희망이었다. 그의 외침은 이제 메아리로 울려 퍼지고 있다.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한 포털 사이트가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9월말부터 ‘기록이 없으면 역사도 없다’를 화두로 삼아 국가기록물 폐기실태와 문제점을 연재기획기사로 보도하고 있다. 이는 반항의 시작에 불과할 것이다.

*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책임연구원.

주요 논저 : 「조선총독부 기록물을 위한 기능분류체계 개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0(1), 2003. 3; 「기록물을 위한 단체 전거레코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2), 2002. 9; 「공개활성화를 위한 전자기록물 관리정책 연구」 『한국비블리아』 12(1), 2001. 6

국가기록 관리실태를 다각적으로 진단

이 책은 단순한 이론서나 교과서가 아니다. 국가기록관리체제의 개혁을 위한 정책제안서이자 기록문화운동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서이다. 그의 주장은 선명하다. <역사기록관에 ‘기록이 없다’><공공기록관리법은 ‘개혁적’인가><정부기록보존소 변혁을 위한 원칙들><지방의 기록문화는 기록관리기관 설립에서 시작된다><기록유산의 창조자 아키비스트><우리시대 기록의 상징이 필요하다>등으로 이어지는 각 장의 제목만 보아도 개혁과 실천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각 장에서 다룬 내용을 좀더 살펴보자.

제1장에서는 공공기록 부재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며 그러한 결과의 원인을 구조적인 측면에서 밝히고 있다. 기록관리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기록관리조직도, 전문가도 갖추지 못한 기록생산기관이 생산에서 폐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처리하도록 한 것은 결국 국가가 무차별적 기록 폐기를 조장한 것이나 다름없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법 제정으로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최근 정부 각 부처의 기록물 관리 실태조사에 의하면 귀중한 국가 기록이 법에 정해진 심의 절차 없이 폐기되고 있었으며, 법 자체가 가진 문제점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제2장에서는 공공기록관리법의 개혁성과 함께 그 한계를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미완성의 개혁입법을 완성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국가기록관리체제 확립을 위한 구조적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기록보존소가 기록관리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과 함께,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이 분리된 국가기록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아울러 학계 및 시민사회 영역과 협력하여 한국적 기록관리의 모형을 만들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저자가 이 책 전반을 통해 상당히 주안을 두는 점은 지방 고유의 기

록관리체제를 갖추는 일이다. 제4장에서는 해당 지역의 역사를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역사기록관을 설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임을 강조하고 있고, 지역적 특성을 가진 레코드센터의 설립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지방역사기록관 설립을 위해 기록문화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피력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공공기관에 기록관리전문가를 배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아울러 기록유산의 창조자로서 아키비스트가 갖추어야 할 전문직 윤리를 제시하고 있다.

제6장에서는 대통령기록과 회의기록을 위한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회의록의 생산 및 관리는 특히 저자가 오래전부터 연구해 온 영역으로 심층적인 문제 진단과 함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대통령기록과 회의록 등 중요기록의 비공개 문제, 전자기록 관리의 원칙과 방향 등의 문제도 다루고 있다.

제도개혁과 기록문화운동의 방향 제시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보다도 실천을 중심에 두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기록관리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데에 그치지 않고 제도개혁 차원에서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당면과제를 열거하는 데에서 한 걸음 나아가 ‘선택·집중’할 부문을 제시함으로써 기록운동 주체들이 지향해야 할 전략의 일단을 제시하고 있다. 모든 이론적 논의도 실천으로 수렴시키고 있다.

그는 또한 제도 개혁만큼이나 개혁을 추진해 나갈 주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그의 입장은 지방기록관리체제와 관련하여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아래로부터의 기록문화운동과 지방정부의 국가기록관리체제 변혁의지가 결합될 때 지방기록관리기관이 제대로 만들어지고 지방기록문화를 꽃피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춤춤한 이론을 기대하는 이들은 약간 아쉬울 것이다. 당위와 열정이 분석을 가리는 대목도 더러 눈에 띈다. 그러나 그에게 기록관리 현실은 너무나 긴박하고 그만큼 마음도 바쁘다. 이 책이 서문에서 밝힌 의도 역시 이론적 모색이라기보다는 역사학자는 물론 기록관리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기록학 연구자와 학생들과 국가기록 관리에 대한 문제의식을 나누고 국가기록 관리체제 변혁의 원칙과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기록관리의 이론과 실제’라는 제목이 그다지 적절한 것 같지는 않다.)²⁾

기록관리주체로서의 소명의식 담겨

이 책의 필자 곽건홍은 한국 근대사를 전공하는 역사학자이다. 그가 1999년부터 기록관리현장에서 일하게 되면서 목도한 것은 역사기록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이었다. 역사학자로서의 문제의식에 출발하였으나 국가기록이 올바르게 관리되어야 비로소 민주주의 사회로 진보할 수 있다는 인식으로 확장된다. 국가 기록관리체제를 변혁하는 일은 기록관리 현장에 있는 그에게 ‘천형’으로 다가온다. 그는 그 천형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그리고 이 땅에 기록문화를 바로 세운다는 소명의식이 기록학계나 현장에 확산되기를 촉구한다.

기록을 남기는 일이 꼭 역사학자만의 몫은 아닐 것이다. 기록 없는 삶이 그저 소멸하는 삶이듯, 기록 없는 사회는 희망 없는 사회다.

“뜨겁던 내 심장은 날이 갈수록 식어가는데/ 내 등 뒤에 유령들처럼 옛 꿈들이 날 원망하며 서 있네” 신해철의 노래구절이다.

역사를 남기는 일에 동참하자. 우리의 꿈과 희망이 유령이 되어 우리를 노려보기 전에.

2) 아울러, archives를 ‘역사기록관’으로, 현행 법률상의 자료관을 ‘기록관’으로 명명한 점은 학계 및 현장의 전문가들과 보다 충분한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